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상생과 공영을

박 영 호

국제관계연구실 실장

이명박 대통령이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향후 국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로 나가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달았다고 강조하고, 건국 6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를 미래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발전'과 '통합'을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로 내세웠다.

이러 경제와 에너지, 환경,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한미 FTA, 사회통합, 의식의 선진화와 신뢰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상생과 공영의 길로 개척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다. 남북관계도 국가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과정은 남한만의 이익이 아니라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는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것인가.

분단과 냉전구조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현재 유엔의 회원국은 192개국이다. 남한은 2006년 기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명목 국민총소득(GNI) 세계 12위의 국가이다. 조선 능력은 세계 1위이며, 반도체, 디지털 가전, 철강,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분야는 세계 5위권의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은 세계의 통상·산업 강국이다. 동시에 남한은 독재와 군사권위주의를 경험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수백 년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의 선진국들에서도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정착되었다. 미국의 스탠리재단은 남한이 2025년이면 세계에서 9번째의 경제규모를 갖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반해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이식된 북한은 경제적으로 세계 최하위의 국가 군에 속하며 실패한 국가로 평가된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1년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비슷했다. 그러나 소득격차는 벌어져 2006년 기준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 규모는 남한의 1/35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북한은 '주체경제'란 주장이 무색하게 1990년대 이래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가져온 것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고달픈 삶이다. 정치적으로 북한은 부자세습의 전체주의적 개인지배 독재국가로 남아 있다. 독재자의 개인권력과 정권의 유지를 위해 선택한 것은 핵무기 개발이며 선군정치이다. 같은 사회주의로 출발한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 30년을 맞고 있으며 세계가 중국의 발전에 놀라고 있다. 심지어 쿠바까지도 기존의 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개방하고 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은 각각 성공과 실패의 길을 걸어오면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를 해왔다. 남북대화의 역사는 이미 37년이 지났으며 남북교역의 물꼬가 터진지도 20년이 되어 간다. 2007년 말까지 남북한

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총리급회담 등 각급 수준의 당국 간 회담을 585차례 개최했다. 「7·4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담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각종 합의서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동·서독이 통일된 지 20년이 다가오며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과학혁명, 자유무역의 시대이다. 세계 경제는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시장경제로 통합되고 있으며, 광속도만큼 빠른 정보 소통은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좁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나 통일정책에 대한 접근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남한의 국가발전 전략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21세기 남한의 국가적 소명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양 위에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남한의 선진국가로의 발전 전략에는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외형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남북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인적 교류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한 국민들이 금강산과 개성을 관광하고, 개성공단에서는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쌍방 지향적이고 호혜적이기보다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가는 일방 지향적이고 지원적인 성격이 지배적이다. 또한 남북관계는 때때로 발생하는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중단에서 보듯이 북한의 자의적인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대화의 재개를 북한의 선의(善意)에 기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남북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정치·군사적 화해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한 핵문제는 아직도 남북관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결국 북한은 핵실험까지 했다. 북한은 자신의 핵 억제력이 남한의 안보를 보장했다는 궤변으로써 남한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합리화시켰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마치 남북관계의 발전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1990년대 초 ‘북한 바로알기’가 통일이상주의의 신화(神話)에 빠졌던 것과 같이 남북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신화에 빠졌다. 이러한 착각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도 그에 대해 단호함을 보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북한이 각종의 남북합의를 자기 편의대로 활용해도 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켜주었다. 남북관계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중요하다.

셋째, 「6·15 공동선언」에 포함된 이산가족 문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도 마찬가지다. 남한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 견지에서 송환함으로써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미 70~80대에 접어들었고,



많은 이산가족이 고향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넷째, 북한 내부의 모습이나 북한의 행위를 우호적이거나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범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먼저 지원을 하면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조치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거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판단의 오류를 범했다. 오히려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정책을 당국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자기 선택적인 접근을 위해 활용하였다.

다섯째,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자기 합리화 논리의 함정에 빠졌다. 남북교류·협력의 증대로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가 증대되었으나, 북한 정권의 압제적 성격이 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은 오히려 ‘우리민족끼리’ 논리로 남한 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지속을 중시한 나머지 남한의 오늘을 있게 한 역사적 발전과정과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등한시 하였다. 남한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정상적인 북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한·미 관계를 폄훼함으로써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초래하였다.

결국 남북관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는 물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지체시키고, 북한의 남북관계에 임하는 자세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더욱이 남북한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양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된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다. 바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비롯하여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한 사이의 중요 합의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협의하고자 제안했다. 그 제안에는 그러한 합의들이 존중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강구하자는 창조적 실용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당국 간의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북한 당국이 순수하게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한다면 이러한 제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남북 당국 관계의 일시적인 정체가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의 억지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한 걸음의 후퇴로 보이는 교착상태는 두 걸음의 전진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북한지도부와 당국도 이제는 ‘북한식’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북한 주민들의 삶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